도청이전 신도시 성공적 추진 및 분양촉진 방안

2010. 5. 17

송 두 범(연구위원)





목 차

- [] 논의의 배경
- Ⅲ 도청신도시와 거시적 영향요인
- Ⅲ 도청신도시의 성공적 조성방안
- ₩ 도청신도시의 분양촉진 방안

I 논의의 배경

- ▶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은 정부의 직할시 도입이 직접적 이유
- 따라서, 중앙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국책사업 성격
-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
- ▶ 신도시 조성에 미치는 거시적 환경요인 검토를 토대로
 - 도청이전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방안
 -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도청이전 신도시의 분양촉진 방안 모색

Ⅱ 도청신도시와 거시적 환경요인

1. 광역경제권과 도청신도시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한 고려가 없다

- ▶ 광역경제권 정책
 -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포함
 - 도청이전 신도시 언급 없어 지방정부의 프로젝트로 간주
- 도청이전 신도시 내 기업창업시
 - 기업도시, 혁신도시 수준의 법인세, 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대응

2. 세종시 발전방안과 도청신도시

·세종시 발전방안은 도청신도의 산업입지 매력성을 감소시킨다.

- 2010년 1월 25일 행정도시특별법개정안 입법예고
 - 세종시 발전방안(세종시 수정계획) 포함
 - : 행정기능은 교육과학경제기능으로 대체
 - :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한 산업입지 매력성 감소 우려
- 세종시 자족용지(산업, 대학, 연구기능)비율 : 원안의 3배
 - 원안 6.6%, 수정안 20.7%
 - → 도청이전 신도시로의 기업유치 기회 제한 우려

3. 저탄소 녹색성장과 도청 신도시

·저탄소녹색도시는 필요하지만,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도청이전 신도시의 저탄소녹색도시 조성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은 시대적 사명
 - 사업비 증가 예상, 지자체 단독사업 추진의 어려움
- ▶ 재원확보 및 정책적 지원방안 필요
 - 자금지원, 세제지원, 각종인센티브 제공 및 녹색펀드 조성 등
 - 탄소저감목표치 설정, 도시계획시설의 탄소배출 감축의무비율 설정,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확보, 환경계획과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등

4. 주택시장의 침체와 도청 신도시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한 도청이전 신도시 내 토지 및 공동주택 분양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 주택경기 침체 지속
 - 주택시장의 침체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
 - 도청이전 신도시내 토지, 공동주택 분양에 상당한 난관 예상
- ▶ 토지 및 공동주택 분양활성화 방안 모색
 -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적극적 마케팅 기법 등 도입

5. 수도권 규제완화와 도청 신도시

·수도권 규제완화는 도청이전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정착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도권기업의 기업입지규제 강화
 - 기업은 각종 인센티브 불구 수도권 선호
 - 도청이전 신도시내 기업유치수단으로 가장 효율적
- 수도권규제완화 논의 유보 필요
 - 지방활성화 선도프로젝트(도청이전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성공적 정착
 - 지방의 경쟁력과 자생력 구축

6. 국가균형발전과 도청 신도시

- ·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청 신도시 조성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상의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이 지방자치단체 단위사업으로 폄하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이상
- ▼국가 및 충청권 균형발전 계기가 되는 비중있는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필요
 - 충청권 서해안에 거점도시 기능
 - 대전, 세종시, 청주권과 천안, 아산권 중심의 공간체계 개편 기능



도청신도시의 성공적 조성방안

1. 도시매력물의 조기확보

·도시의 매력물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도청이전 신도시의 성격은 수요창출형 신도시
 - 필수 공공기관 제외하고 자발적 이주 수요 부족
 - 도와 사업시행자가 수요 창출 필요
- 수도권 및 대전권 주민 유치
 - 초중고등학교(국제학교 포함), 대학, 고급병원, 쇼핑센터, 기업 등
 - 매력시설물의 선투자가 반드시 필요

2. 집중개발 및 압축도시 지향

·집중개발 및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지향해야 한다.

- ◦집중개발
 - 도시개발 초기 업무시설(비즈니스파크), 상업시설 중심 집중개발
- ☞ 압축도시
 - 대중교통 중심축으로 집약적 공간구조, 도시기능 집적
 -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로 자족기능 확보
 -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 기반시설 설치비용 절감
- ▶ 집중개발 공간 이외에는 오픈스페이스와 녹지, 저밀도 주거지 조성

3. 도청사 및 신도시 진입도로 국비지원 확대

·도청사 및 신도시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이 관건이다.

▶ 전남도 지원비 : 6,304억원

- 청사신축비: 1,687억원 지원

- 진입로: 3,72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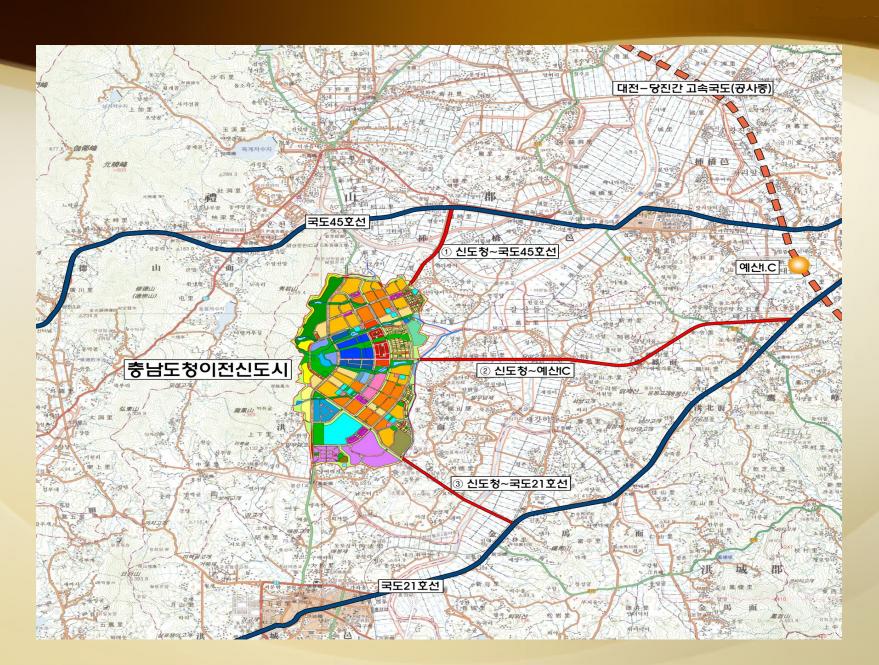
- 신도시 부지지원 : 896억원

▶ 충남도 지원비 : 961억원 확보

- 청사신축비: 321억원

- 진입로 : 640억원 확보

 충남도청사 건축비 2,327억원, 신도시-예산 IC간 진입도로 순공사비 1,077억원 지원 필요(국가지원지방도 기준 적용)



4. 공공, 유관기관 유치 및 지원노력

·공공기관, 유관기관 유치 및 지원이 도시성패의 열쇠이다.

- 충남도청 신도시 이전희망기관 및 단체 수: 136개
 - 공공기관: 22개, 유관기관: 32개, 단체: 82개
- 이전대상기관장과 충남도지사간 이전이행협약 체결
 - 이전시기, 방법, 지원 사항 규정
- 이전 기관 및 이전직원에 대한 동시 지원 필요
 - 이전기관: 청사건축지원, 업무수행지원
 - 이전기관 직원 : 주택, 교육 및 정주여건, 금융, 이사 등

5. 주변지역과의 연계, 균형발전

·도청이전 신도시와 주변도시의 연계,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 도청이전 신도시의 긍정적 측면
 - 충남의 중추기능 집적으로 충남의 균형발전 견인
- 도청이전 신도시의 부정적 측면
 - 주변도시의 공동화 유발 요인(남악신도시 사례 확인)
- 부정적 측면 최소화, 긍정적 측면 극대화
 - 기존농촌, 도시지역 재구조화 : 읍급도시 도심활성화 사업 등
 - 공동협력사업 : 광역시설 확충 및 공동이용체계 구축 등
 - 미래성장동력: 미래성장동력 인프라 구축 등

6. 도청이전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도청이전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에 핵심인 입지기업에 대해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

- ▶ 자족기능 강화
- 지식기반산업 유치, 지역내 특화산업에 대한 특화단지 조성, 대외접근 성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공급,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공급, 쾌적한 주거공급 및 녹지편의시설 공급, 양질의 교육시설 공급
- ▶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
 - 수도권소재 319개 기업의 세종시 입주의사 조사
 - 이전 고려한 기업체는 16.6%에 불과
-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한 인지도 향상, 긍정적 태도 형성 위한 적극적인 홍보,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사고의 전환요구)

7. 홍성, 예산 교육특구 활성화

·홍성, 예산 교육특구를 전국 제일의 국제문화 교육의 산실로 육성하여 지식기반 도시의 출발점이 되도록 한다.

- ◉ 홍성, 예산에 국제문화 교육특구 지정
 - 국제교육문화특구에 부합하는 명확한 목적
 - 기초자치단체 특구담당직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 구비
 -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
- **▼도청이전 신도시가 knoeledge city가 되기 위해서**
 - 지식기반 도시의 기초환경 구축
 - 직업 및 평생학습 도시 환경 구축

8. 특성화 대학의 유치

·직업중심대학 등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여 통합대학으로 운영한다.

- 직업중심대학 모델 도입
 - 지역내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이 연합하여 교수, 시설, 교육프로 그램 공동운영
 - 통합대학은 법률상 단일대학, 대학의 지구별 캠퍼스체제로 운영
 - 학과: 이공계/보건의료/관광/금융/디자인/문화/지역특화산업/바이오/ 정보통신/자동차 등
 - 학위: 2년제, 4년제, 직업전문학위(석박사)

9. 정부시범 및 모델도시 사업 활용

·정부시범 및 모델도시 사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간접적 국가지원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 중앙정부 주도 시범사업 등 정책지원
 - 자전거 시범도시, 생태시범도시,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 도시경쟁력과 도시이미지 제고로 외부인구 유입 촉진



도청신도시의 분양촉진 방안

도청이전 신도시 분양여건

- 총 995만 m² (300만평)중, 분양가능면적은 55%인 550만 m² (166만평)
- 초기 인구유입은 1만 명 정도로 수요기반 매우 미약할 것 예상
- 조성원가는 189만 3천원(3.3 m²)으로 세종시에 비해 저렴
- ☞ 토지거래 규모 감소, 부동산 대출규제로 토지거래활력 약화
- 공동주택 분양시장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재량권 강화 추세

1. 부동산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마케팅전략 필요

·부동산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마케팅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 ◉ 부동산 시장 침체
 - 수요자가 매매를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예상
 - 초과공급에 따른 마케팅전략 수립 요구
- ▶ 공공기관 주도 도시개발사업
 - 마케팅 전략수립 및 실천 한계, 적극적 마케팅 계획수립, 실천필요
 - 안심마케팅 기법(원금보장, 확정임대료, 선임대 후분양상가 등)
 까지 심도있게 논의
 - 그러나 안심마케팅은 경기회복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위험성 높다는 점 충분히 인지필요

2. 수요를 고려한 유연성 있는 토지상품의 개발

·수요를 고려한 유연성 있는 토지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 수요자 특성에 따른 획지 분할 및 합병 모델 개발
 - 대상 부지 중심의 세부적인 시장성 분석
 - 설계단계에서 부터 마케팅 개념 도입
 - 초과공급에 따른 마케팅전략 수립 요구
- 개발토지의 판매 및 신도시조성
 - 정부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수요자 의식변화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의 정기화
 - 새로운 토지상품 개발 및 판매요구

3. 판매방식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 수립

·판매방식을 위한 사업추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판매방식 위한 사업추진전략 수립
 - 토지분양 시장성 분석 실시 후
 - 토지용도별 자체 개발 방식
 - 공공-민간합동형 FF사업 및 사업계획서 공모 방식 선택
- 분양방식
 - 사업계획서 공모방식 : 사업시행자 도입가능 방식, 도시의 체계적 개발에 중점 두는 방식
 - 공공-민간합동형 FF형: 330만m² 이상, 상업지역에 적용가능, 민간 기업이 참여가능한 개발이윤 확보검토

4. 기업 및 연구소 이전, 정착비용 지원 확대

·기업 및 연구소 이전, 정착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현행 기업지방이전 관련 보조금 제도
 - 수도권 소재 공장, 본사, 연구소 지방이전시
 - 입지 및 투자,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지자체에 보조)
- ◉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시 요구
 - 법인세 감면, 이전전 양도차익 법인세 납부연장,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한시적 재산세 면제 등 혜택부여
 - 공장, 연구소, 업무시설 관련 부지구입 및 건축비, 기계설비투자비, 연구개발투자비 등에 대한 금융지원

5. 장소마케팅과 연계한 부동산 마케팅

·장소마케팅과 연계한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 장소마케팅의 필요성
 - 도시이미지 형성과 정체성 확보
 - 신도시로서의 한계극복
- ▶ 장소마케팅 방향설정
 - 도청이전 신도시 상징 매력물 이나 시설 건축
 - 이벤트 및 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
 - 장소이미지의 홍보 및 촉진활동 등과 관련된 마케팅

6. Anchor Tenant유치에 의한 토지분양 극대화

·Anchor Tenant유치에 의한 토지분양을 극대화해야 한다.

- 지구별(상업, 산업, 주거) 차별성 부각 위한 Anchor Tenant 유치
- 인구유입 촉진과 상권활성화에 기여

7. Loss Leader 전략의 구사

·Loss Leader 전략을 구사하는 유연성도 요구된다.

- ●손실 감수한 특별가격 할인 통한 Key Tenant부지 조기 매각, 개발
 - Loss Leader: 특매상품, 미끼상품, 유인상품

8.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와 공동마케팅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와 공동마케팅도 필요하다.

- 부동산 분양대행 전문기관 선정 공동으로 분양마케팅 추진
 -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발효과 큰 용지부터 단계별 집중판촉필요
 - 산업용지(1만평), 공동주택(50만평), 골프장(12만평) 등

9. 이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관 등 이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파격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 및 교육기관, 기업, 병원, 연구소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가능
- 이주기관 종사자 공동주택 분양시 장기 저리 융자 등 금융인센티브 부여

10. 다양하고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동원

·다양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총 동원해야 한다.

-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활용
 - 건설사 대상 광고활동
 - 인터넷홍보, 방송, 신문광고
 - LED전광판 광고
 - 부동산투자신탁회사, 부동산컨설팅회사 등과 제휴
 - 랜드마크 시설, Anchor Tenant 이용 분양마케팅
 - 판매전문가 양성 및 지원, 인센티브
 - 충남개발공사에 시장분석 전담직원 채용 등

감사합니다